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사고, 與野 ‘불협화음’

4월 임시국회 시작

권미혁 더민주 의원
“국가직화법 한국당서 반대, 무산”

이재익 한국당 의원
“반대 아냐... 與서 사전조율 안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4월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현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상임위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부터 충돌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관 국가직화법’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법안 처리가 무산됐

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소방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소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 이재익 의원은 권 의원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정부·행안부·소방청·재정당국·기재부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전했다.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번 재해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불협화음을

낸 바 있다. 한국당은 앞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며 “예비비 집행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선 추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으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한편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약 20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국내유입 사전차단

중국·몽골 등 아시아서 335건 발생 정부, 담화문 발표... 예방참여 당부

올 겨울 민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는 바이러스가 북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변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법무부 등 10개부처 합동으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ASF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에는 ASF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해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ASF 발생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

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등 외국인들께서도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2021년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우리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통합관리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해 이용주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우선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조직 개편...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했다.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 ‘근

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우선 신설된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기부 ‘중소 연계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지원사업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매년 ▲ 마케팅 역량 강화 ▲ 유통망 진출 ▲ 공동 AS(애프터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5~2016년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받은 기업이 유통망 진출을 희망하면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자동선정하거나 선정 시 가점을 줬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폐지했다.

그 결과 두 사업간 연도별 연계지원 비율이 2015년 65.8%에서 2016년 54.8%, 2017년 45.5%로 매년 감소했다.

감사원, 중기지원사업 감사 결과 마케팅·유통 연계 안돼 ‘효율성’↓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을 받아 제품과 홍보 전략을 개선한 중소기업들이 정작 유통망 진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온라인 기획전, TV 홈쇼핑 등 유통망별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추진

병무청은 9일 블록체인을 이용해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를 활용하면 인증서 없는 민원출원 서비스 등 병무행정 업무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병무청이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 간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가 추진되면 병무청 누리집 이용 시, 인증서가 없더라도 민원출원이 가능하다. 또 민원출원 후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부인방지 기능도 추가돼 민원처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병무청은 보존처와 협조해 일부 종이 증명서로 발급되고 있는 병적발급 체계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존 관련 민원 신청을 할 때 병적증명 신청에 동의를 통해, 병무청 방문 없이 보존처에서 발급신청하는 윈스톱 처리 체계로 만들어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n@